순천 법원·여수 경찰 인사태풍 '술렁'

부장판사 3명 모두 중앙서 내려와

'비리' 경찰 절반 수준 222명 전보

여론 반영 '대폭 물갈이 인사' 다양한 추측도

여수, 순천지역 법원·경찰이 메가톤급 인사태풍에 휩싸이고 있다.

대법원은 오는 25일자로 광주지법 순천지원 부장판사 3명을 모두 교체한다. 대법원은 대법원 재판연구관 2명과 서울고법 판사 1명을 순천지원 부장판사로 인사 조치하는 한편, 기존 부장판사 3명을 다른 지역으로 옮기기로 했다.

이번 인사는 2년마다 이뤄지는 순환 인사지만 지역 법조계 안팎에서는 최근 순천지원의 이홍하 서남대 설립자의 보석 허가 논란과 맞물려 다양한 해석도 나오고 있다.

전남지방경찰청도 금고털이와 성폭행 등 현직 경찰의 비리가 잇따르면서 고인 물이 썩어 흘러넘쳤다는 비판이 거세지자 대규모 물갈이 인사를 단행했다.

경찰 스스로 '경감·경정 등 중간 관리자의 방관적 태도가 의무위반 행위 발생의 중요한 원인'이었다는 점을 인정하고, 같은 경찰서 같은 보직에 재발령을 제한하는 등 혁신적인 인사를 단행했다.

최근 각종 비리로 물의를 빚었던 여수경찰의 경우 전체 직원 455명의 절반 가량인 222명이 바뀌었고 경감·경정급은 전원이 이삿짐을 쌌다. 순천(131명), 광양(68명), 고흥(72명)도 대규모 인사가 이뤄졌다.

검찰도 다음달 정기 인사가 예정돼 있는데다, 정권이 바뀐 뒤 이뤄지는 첫 자리 이동으로 어느 때보다 법조 개혁에 대한 여론의 관심이 높다는 점 등을 반영하면 인사폭이 상당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 상황이다.

/김지을기자 dok2000@kwangju.co.kr
/순천=김은종기자 ejkim@

농심, 발암물질 검출 논란

라면스프 '벤조피렌' 초과

지난해 너구리 등 일부 제품에서 발암물질인 벤조피렌이 검출돼 홍역을 치른 농심이 다시 벤조피렌 논란에 휩싸였다.

이번에는 기준치 이상의 벤조피렌이 사용된 고추씨기름을 라면스프 원료로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19일 식품의약품안전청 발표에 따르면 최근 중국에서 수입된 고추씨기름에서 기준치 2ppb(10억분의 1)를 초과하는 벤조피렌이 검출됐다.

문제의 고추기름은 농심 계열사인 태경농산에서 생산한 '볶음양념분 1호'와 '볶음양념분 2호'에 사용됐으며 이 양념분은 농심 라면스프에 쓰였다.

/연합뉴스

'도시횡단 프로젝트 광주' 리허설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추진단이 진행하는 아시아 예술극장 창작 레지던시 '도시횡단 프로젝트 광주' 행사 중 하나인 '유랑축제, 광주 침묵의 시간들'(22~23일) 참가 예술인이 19일 공연이 열릴 전일빌딩 외벽에서 리허설을 하고 있다.

/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장학사 시험 유출' 혐의

김종성 충남교육감 음독

장학사 시험문제 유출을 지시한 혐의(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로 경찰에 소환돼 조사를 받은 김종성(64) 충남도교육감이 음독을 해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

19일 낮 12시 30분께 대전시 중구 태평동 교육감 관사에서 김 교육감이 음독을 한 채 쓰러져 있는 것을 아내가 발견, 119에 신고했다.

전날 오전 9시 50분께 피의자 신분으로 충남지방경찰청 수사2계에 재소환돼 밤 11시 30분께까지 조사를 받고 돌아간 지 13시간만이다.

김 교육감은 출동한 구급대원에 의해 가톨릭대학교 대전성모병원으로 옮겨졌으며,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연합뉴스

최열 환경재단 대표 수감

부동산 개발업체로부터 청탁과 함께 금품을 수수한 혐의 등으로 기소돼 최근 대법원에서 징역 1년이 확정된 최열(64) 환경재단 대표가 19일 서울 남부구치소에 수감됐다.

최 대표는 이날 오후 서울 종로구 누하동 환경운동연합 마당에서 지인들이 마련한 환송식에서 "어떤 면에서 제게 이번 일이 새로운 자극이라고 생각한다"며 "기쁜 마음으로, 더 튼튼한 몸으로 돌아오겠다"고 밝혔다.

환송식에는 이수호 전 민주노총 위원장을 비롯해 문국현 전 창조한국당 대표, 민주통합당 원혜영 의원, 소리꾼 장사익씨 등 최 대표의 지인과 시민사회 활동가 200여명이 참석했다.

/연합뉴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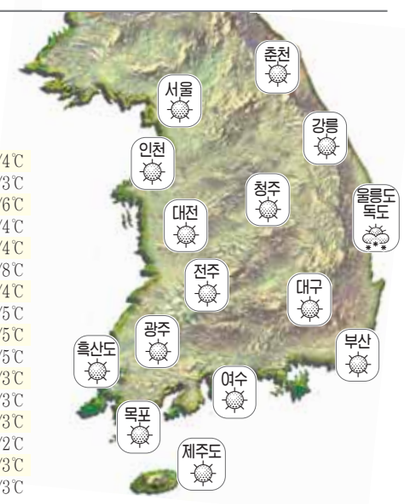
오늘 날씨

해뜸 07시 13분 해짐 18시 19분 | 달뜸 13시 17분 달짐 02시 59분

아침추위

고기압 영향으로 대체로 맑겠다.

광 주	맑음	-6/4℃
목 포	맑음	-4/3℃
여 수	맑음	-2/6℃
나 주	맑음	-8/4℃
완 도	맑음	-3/4℃
구 례	맑음	-7/8℃
강 진	맑음	-4/4℃
해 남	맑음	-3/5℃
장 흥	맑음	-4/5℃
순 천	맑음	-7/5℃
영 광	맑음	-7/3℃
진 도	맑음	-3/3℃
전 주	맑음	-7/3℃
군 산	맑음	-7/2℃
남 원	맑음	-9/3℃
흑산도	맑음	0/3℃



〈오전〉 바다	풍향	파고
서해 남부 앞바다	북서~북	1.0~2.0m
먼바다	북서~북	1.5~2.5m
남해 서부 앞바다	북서~북	0.5~2.0m
먼바다	북서~북	1.5~2.5m

체감온도	감기지수	뇌졸중지수
관심	매우높음	매우높음

〈오후〉 바다	풍향	파고
서해 남부 앞바다	서~북서	0.5~1.0m
먼바다	서~북서	0.5~1.5m
남해 서부 앞바다	북서~북	0.5~1.5m
먼바다	북서~북	1.0~2.0m

	밀물	썰물
목포	09:41 21:31	02:23 16:21
여수	05:28 17:44	12:11 23:51

◇주간날씨 기상안내전화 : 국번없이 131 〈광주지방기상청〉

날 짜	21(목)	22금()	23(토)	24(일)	25(월)	26(화)
날 씨						
최저/최고	-4/6	-3/7	-3/6	-3/8	0/8	0/8

떠나는 광주 사립학교 교사들

명퇴 교원 갈수록 급증…2월말 49명, 공립의 3.5배

입시지도 부담에 인건비 아끼려 재단측 압박 해석

광주지역 사립학교 교사들의 명예퇴직이 크게 늘고 있다. 정원 대비 명퇴신청 비율을 보면 공립보다 사립이 3.5배나 높다.

19일 광주시교육청에 따르면 2월말 명예퇴직을 신청한 광주지역 교원은 총 85명이다. 이 가운데 공립교사가 36명, 사립이 49명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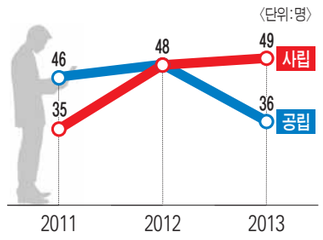
연도별 공·사립 명퇴 신청을 현황을 보면 지난 2011년에는 공립 64명(2월 신청 46명), 사립 50명(〃 35명)으로 공립이 많았고, 2012년에는 공립 64명(〃 48명), 사립 64명(〃 48명)으로 같았다가 올해 역전됐다.

특히 공립교사(약 9000명)가 사립(약 3500명)보다 2.5배가량 많은 점을 감안하면 사립학교의 교원들의 명퇴 신청이 공립보다 3.5배에 달하고 있다.

이는 사립고교가 많은 광주의 교육 특성상 해마다 입시지도 부담이 가중되는데다, 사학 재단에서도 인건비 등을 이유로 명퇴를 압박을 하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광주시교육청 관계자는 "최근 들어 사립학교 교사들의 명예퇴직 신청이 크게 늘고 있다"며 "입시지도 부담과 함께 사학재단에서 인건비 등을 이유로 경력이 많은 교사들에게 암묵적인 명퇴 압력을 가하는 것도 한 원인이다"라고 말했다.

■광주 공·사립 교원 2월 명퇴 신청 현황



/박정욱기자 jwpark@kwangju.co.kr

'안철수 사진은 삭제, 도종환 詩는 유지'

교과부, 정치인 관련 교과서 수록 검정기준 확정

앞으로 초중고 교과서에 정치인의 작품은 수록이 허용되지만 정치인의 이름이나 사진, 관련 글은 실을 수 없게 된다.

작년 교과서 수록 논란을 일으킨 도종환 국회의원의 시(詩) 등 작품과 안철수 전 대선후보에 관한 내용의 경우도 의원의 시는 계속 교과서에 실을 수 있지만 안 전 후보의 사진이나 관련 글은 삭제해야한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이 같은 '교육의 중립성 관련 검정기준 적용 지침 및 검정 절차 개선안'을 마련, 올해 2~8월 진행되는 2013년도 교과서 검·인정 심사 때부터 적용한다고 19일 발표했다.

교과부는 개선안에서 교과서의 정치적 편향성을 막기 위해 정치인의 작품은 수록할 수 있도록 하는 반면 특정 정치인의 사진, 이름, 서술 및 정당로고, 타인이 쓴 정치인에 대한 글은 수록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했다.

정치인의 작품을 수록할 때는 정계입문 전의 작품이고 관련 학계나 예술계에서 가치를 인정받은 작품일 경우, 작가의 정치적 신념이나 이념적 편향성이 드러나지 않은 내용일 경우 검정심의회 판정을 받아 수록하도록 했다.

교과부는 '정치인'의 범주도 명확히 했다. 정치인은 ▲대통령이나 총리, 각부장관 등 국가 공권력을 행사하는 권한을 부여받은 자 ▲선출직 공무원 및 공직선거 입후보자 등 공적 권력을 추구하는 자 ▲공적권력을 추구하는 집단(정당)에 소속된 자 가운데 일반 당원을 제외한 당직자다.

단 대통령은 파당적 이해 관심을 넘어 국가를 대표하는 존재로 해석, 이름이나 사진 등을 게재하는 것을 허용키로 했다.

/연합뉴스